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6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5. 10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가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우리군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.
- 나.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요청과 전자정부법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지원에 대하여 군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- 가. 정보화기본계획 수립방법 변경(안 제4조)
- 나.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변경(안 제5조 및 제6조)
- 다. 정보화마을에 대한 군 재정지원 근거 신설(안 제8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,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, 제23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4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
- (5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5. 8. 27. ~ 9. 16.(20일간)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생략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5년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”를 “달성군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”를 “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성별구성에 있어 한쪽성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”를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한다.

제5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이버 또는 서면에 의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을 심의한다.”를 “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정보화 추진 지원)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

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,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
2. 그 밖에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산정기준 및 감면비율에 관한”을 “산정기준, 감면 등에 관해서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1**관계법령**

□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

제6조(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,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(이하 "전략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립·확정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5.6.22.>
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1.5.19., 2013.5.22., 2015.6.22.>

1.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
2. 행정, 보건, 사회복지, 교육, 문화, 환경, 과학기술,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
3.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
4. 산업·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
5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,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
6.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
7. 개인정보 보호,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,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
8.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
9.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·제도의 개선
10.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
11.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
12.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
⑤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·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6.22.>

□ 「전자정부법」

제65조(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역사, 문화, 복지,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
2.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
3.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
4.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
5.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3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.

